

# 檢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후 범죄수익 2조 추징보전

### 2023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직제화 이후 구속기소 인원 급증·추징보전액 누계 2조 금융·증권·코인 범죄 날로 지능화·고도화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효율적 대응·수사에 박차 부당이득 산정·리니언시 규정도 올 1월 신설돼 "금융·증권 범죄 '남는 장사'로 인식...엄단할 것"

검찰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뒤 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합동 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 복원 후 22개월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증가했으며,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약 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폐지됐으나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복원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같은해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합동

수사단(단장 이정렬)이 신설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시스템 정비 이후,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이 2.7배(1.6명→4.3명), 월평균 기소 인원이 2.6배(6.2명→16.0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합수부 복원 후 22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액 누계가 약 2조원(지난 8월 기준 1조97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SG증권발(發) 추가조사 사건 7305억원 ▲영풍제지 추가조사 사건 2789억원 ▲테라·루나 사건 2333억원 ▲에디슨EV 추가조사 사건 148억원 등을 추징보전했다. 이는 합수부가 폐지됐던 28개월간 합계

4449억원을 추징보전한 것에 비하면 4.4배(월평균 5.7배)가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된 전문 수사역량으로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금융·증권범죄와 코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안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수단 폐지 기간, 검찰 직접수사가 중단되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성역'을 자처하며 연쇄적으로 기업사냥 범행을 저지른 공인회계사 출신 추가조사 사범 등 의사, 변호사 등 다수 전문직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난립했다. 이들은 치밀한 사전계획 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지능적이고 대담한 수법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고, 전문직을 동원해 지능적으로 수사방해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합수부 부활 후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합동수사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적인 예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금융·증권사범이 급증한 점을 들 수

있다. 합수부 복원 후 급증한 합수부 복원 후 구속기소한 인원은 49명으로 폐지 기간 14명에 비해 3.5배 늘어났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를 통해 주식시장의 의심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관련 상장사의 공시자료 분석,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구제했다. 이후 금융위는 사안 검토 후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신속·정확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형·예탁결제원·예금보험공사 관련 직원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실체를 규명하는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다. 아울러 합수부는 SG증권발(發) 추가폭락, 영풍제지 시세조종 등 대형 주식폭락사태 직후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신속한 행정조치로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금융·증권 범죄 대응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했으며, 이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지난 1월 추징보전을 통한 범죄수익 박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산정 규정이 신설됐다. 또 공범들이 범

죄수익을 공유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금융·증권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보·수사협조 등 유인을 통해 범죄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 형벌감면(리니언시·leniency) 규정 역시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2800조원대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외형상 성장했으나, 갑수족 지능화·조직화되는 금융·증권범죄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사·재판 절차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낮은 처벌 경향으로 인해 금융·증권범죄는 속칭 '남는 장사'로 인식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공고한 협조체제 아래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 끈질긴 자금흐름 분석 등 실제 규명, 면밀한 법리검토 등 총력을 기울인 집중 수사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선욱기자



퍼포먼스하는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회원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공부 잘하는 약' 먹고 의대 준비?

### 수험생 불안감 악용한 불법·부당 광고 점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사교육 시장에서 반수생, 직장인 등을 겨냥한 야간반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열풍을 틈타 해마다 임시철이면 수험생과 그 가족을 속여왔던 '공부 잘하는 약', '성적이 올라가는 총명탕' 등의 불법 광고가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늘 거짓된 광고와 불법 마케팅으로 잇속을 챙겨왔던 일부 업자들이 의대 열풍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대학 임시철이면 수험생과 그 가족의 불안감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식품·의약품 불법 광고와 판매한 행위는 집중 점검을 통해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집중 점검에서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297건을 적발했다.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의약품의 경우도 식약처의 점검을 빠져나갈 수 없다. 같은 기간 실시한 집중 점검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단속됐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학생이나 수험생이라면 요행에 기대기 보다 평소 골고루 식품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의약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 환경부,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여름철 홍수 대비"

### 오늘부터 3주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예방·호안 유지관리 및 수문·통문 작동 등 위험요소 발견시 4월까지 보수 등 개선조치

정부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전국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에 나선다.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3주간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전국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국가하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이 맡는다.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이외에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번 점검은 ▲예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장제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울

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조치가 어려운 구간이나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연중 집중관리한다. 지정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수기 전·중·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더 지구별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홍수정보의 상호 제공,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계획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여름철 홍수 및 태풍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오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오는 15일까지 공단에 '2023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지난해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 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총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엔 신고한 지난해 보수 총액을 통해 재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는 만큼 보수 총액

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고용·산재 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감경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는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 보험 토털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유나기자